'농도' 전남 현안 농어업 관련 법안들 국회 문턱 넘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농도'전남의 현안인 농어업 관련 법안이 2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농업 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손해는 보험료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 2건이 국회 본회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각각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과 재석 205명 중 찬성 179 명, 반대 9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 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의 일부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했다. 재해 농·어가를 지 원할 때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을 보장하 는 내용도 담았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 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 료율 산정 시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생산비를 일부 보상할 수 있게 됐다. 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입은 손해는 보험료율 산정 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해대책법은 피해 농·어가의 생산비 일부나 전부를 보상하되 농가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 대상품목 등을 고려해 지원을 달리할 수 있게 개정했다. 또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

로 정하도록 했다

재해보험법은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거대 재해 피해로 본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도 록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두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와 연구 용역을 통해 지원 수준, 시행 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를 성사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설명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포함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전운임제는 화주(화물 위탁 기업)와 운송사 간에는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각각 정해 강제하는 구 조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화폐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들 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임명장·위촉장 수여식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하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갑질 논란' 갈수록 확산 … 이재명 정부 부담 줄이기

강선우 후보자 자진사퇴 배경

23일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 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이재명 정부에 부담 을 주지 않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뿐 아니라 동료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강 후보자의 사퇴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날 전격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분석된다.이날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을통해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동료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 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고 사퇴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 만 결정해야 한다"며 "강선우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보좌진 뿐 아니라 민주당 보좌진들까지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 점 등도 강 후보자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 등이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제기하면서 내부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사퇴 여부를 두고 찬반 분위기가 팽팽했다. 다만, 정권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는 못했지만 강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기도 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후보자의 사퇴는 다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은 즉각 풀고 가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늦었지만 자진사퇴한 점을 인정한다"며 "강 후보 자는 인사청문회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후보자였 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강 후보자의 보좌진 대상 갑질이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왔다"며 "강 후보자는 갑질에 대해 (보좌진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운운하며 실제로 청문회장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갑질 자체도 거짓말로 해명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APEC 준비 '동분서주' 특검 출석 조율

8월 1일 '집사 게이트' 수사 참고인 신분 출석…IMS모빌리티 투자 경위 설명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련국들과 한국 초청 사전 행사를 마치고 다음달 1일 김건희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현상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7월 31일 귀국해 8월 1일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다음달 1일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와 가까운 관계인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거액을 투자한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 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 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이들 기업 들은 정상적인 투자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MS에 투자한 HS효성 측도 조사 대상이었으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의장을 맡고 있는 조 부회장은 그동안 베트남, 싱가포르 등 해외출장 중이어서 특검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부회장은지난 15일부터 18일(현지시간)까지 베트남 하이퐁에서 열린 '2025 ABAC 제3차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경제 통합, 지속가능성, 인공지능(AI)·디지털, 금융·투자, 바이오·헬스케어 등 5개 핵심 분야의 실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이를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릴 '2025 경주 APEC 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에게 건의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조 부회장은 이어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나 한국과 베트남 경제 교류 확대와 APEC CEO 써밋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 하는 등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조 부회장은 또 유럽에서 회사 차원의 경제 관련 주요 일정 등을 소화한 뒤 귀국해 특검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신한은행, 경남스 틸, JB우리캐피탈 등 IMS모빌리티의 핵심 투자 사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는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 박춘원 JB우리캐피탈대표가 출석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 예성 씨가 부당한 수익을 얻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 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1차로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 모빌리티, 키움증권 등 4개사의 최고 결정권자에 게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은 최근 IMS모빌리티에 20억 원을 투자한 KB금융 자회사 KB캐피탈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조사 대상 외에도 몇몇 기업이 더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